가자! 노동해방

발행일 : 2008년 5월 1일
발행처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5번지 한길빌딩 3층
전 화 : 서울 (02) 794-1917
울산 (052) 289-5507
홈페이지 : **swl.jinbo.net**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

다가오는 공공부문 투쟁, 정면 돌파를 준비하자!

하나로 똘똘 뭉쳐 싸워야만 이명박의 공세를 돌파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공격이 코앞에 닥쳤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자본가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전경련은 농구에 비유해, "공기업이라는 거구의 센터가 골밑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 기업들이 새로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가?"라며 공공부문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정부가 소유하여 독점수입을 내고 있는 마사회 같은 공적 기관은 민영화해야 한다"며 이윤을 향한 욕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봉쇄하려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필수유지업무라는 새로운 족쇄를 도입해 파업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올해 2월 도시철도파업이 무위로 끝난 것도 필수유지업무가 노동자들에게 미친 심리적 압박의 영향이 크다. 철도 역시 지난해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을 겨냥해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80년대 초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뒤따르고 있다. 노동자투쟁을 분쇄하고 강력한 자본가독재를 확립해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해준 대표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처와 레이건은 단호한 공세를 취해 노동자계급의 저항 진지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뒤,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 민영화 공격이란 결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조합 권리가 크게 축소되고, 대규모로 하청이 도입됐다. 레이건 집권기간에 사회복지수당은 40% 감소했다. 최고 부자 1%의 세금이 14% 줄어든 반면,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의 세금은 28%나 늘었다. 80년대 미국노동자의 실질임금은 5% 떨어졌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영국·미국 자본가들은 잠시나마 숨통을 틔웠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KTX 여승무원이 1년 이상 전개한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주의 투사였다는 이철 사장이 완강하고도 잔인하게 대처한 방식을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투쟁에 대한 자본가들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도시철도와 지하철에서 이미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저들의 태도는 결정됐다. 이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패배의 경험에서 승리의 조건을 배운다

지금처럼 자본가계급 전체가 노동자투쟁을 원천적으로 박살내기 위해 달려드는 상황에서, 특히 공공부문처럼 정부와의 충돌로 곧장 나아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자본가국가와 대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자본가 정부를 과감하게 밀어내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야만 노동자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95년 민영화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했던 한국통신노조의 경험은 교훈적이다. 투쟁대열로 결집한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노조 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조 지도부는 이 투쟁을 자본가정부의 노동운동 탄압과 착취강화 계획에 정면 대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이 파업에 대해 "국가전복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노사분규 차원이 아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파업 결의를 하자마자 정부로부터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명찰을 받았다. 사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었다. 정부는 정면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정부만큼 단호하지 못해 자본가국가에 맞서 정면승부를 벌이지 못했던 한국통신 노조는 안타깝게 패배했다.

이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을 알려준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거 투쟁에 나설 때 정부는 '자본가국가의 운명'을 걸고, 자본가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싸움에 나선다. 우리 역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본가정부에 정면 승부를 걸지 않는 이상 제대로 투쟁을 펼칠 수 없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는 이 투쟁의 표적이 이명박 정부임을, 그리고 여기에서 화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만의 목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공기업 분야에서 먼저 노동자의 저항을 분쇄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 노동자의 목을 치기 위한 공세를 벌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은 곧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선봉이라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각각의 현장에서 투쟁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다른 사업장 투쟁과 연결시켜, 전체 공공부문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의 투쟁강령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을 제시한다 (4면 기사 참조).

이명박 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다.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실질임금 삭감,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등 여러 사업장들이 공통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여러 사업장들이 이명박 정부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하고 있다. 저들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제대로 준비하고 싸우자. 공동투쟁의 깃발을 들고 결전의 시기를 맞이하자!

| 철도 |

구조조정과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기업 정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철도를 포함한 공기업을 정부지주회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정부지주회사 특별법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자본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공기업들을 지주회사를 통해 팔아넘길 생각이다. 철도의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을, 여객과 화물을, 그리고 고속·일반·전철을 분리하여 사유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파업노동자들의 비판에 대해 "KTX에 불이 나도 시민들이 알아서 끌 것"이라고 지껄였다. 노동자의 고용과 승객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단지 비용절감에만 눈이 멀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운전분야에서는 동력차 1인승무를, 시설·전기 분야에서는 핵심업무 외주화를, 차량분야에서는 검수주기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반격도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전동차 분야에서 1인승무를 위해 차장생략을 강행한 사측에 맞서 사복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4월 26일에 성북지구역지부는 1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매표창구폐쇄와 전환배치 계획에 맞서 현 업무를 사수하기로 결의했다. KTX 승무원들도 다시금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영화는 구조조정의 중간역

철도노동자를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철도를 인수할 자본가들이 주머니를 두둑이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윤을 쥐어짜내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물론 민영화된 이후에도 이미 KT에서 보았던 것처럼, 임금 하락과 노동조건 악화, 고용안정 파괴가 끊임없이 노동자의 목줄을 조일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흘리고 있는 민영화 대상 사업장과 일정, 방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현장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분위기와 함께 철도민영화가 언제쯤 진행될지에 대한 걱정으로 어수선하다. 또한 최근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구조조정에 궤도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한 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철도노동자의 각오다.

궤도·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공세에 맞선 투쟁을 앞두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은 정권과 직접 맞서는 한판승부다. 이미 수차례의 파업투쟁 속에서 배웠듯이, 단사에 국한된 요구와 힘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이끌어내 자본가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통해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품앗이 연대가 아니라 죽어도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또한 민영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인력감축,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철도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사회보험, 발전노동자들도 똑같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의 공동투쟁과 단결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느 한 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투쟁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지금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투쟁에서부터 궤도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크고 작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물러섬 없이 진행하여 현장노동자들이 단련되고, 정부와 공사의 의도대로 현장이 통제되고 재편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 절실하다.

3월 29일 전동열차 차장생략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결의대회

| 사회보험 |

인력감축과 감시통제 전면화에 맞서 투쟁하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전국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력감축, 노동자감시통제(ERP) 등을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공단직제와 정원을 축소변경하고 축소된 인원을 노인요양으로 전직하게 한다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1월부터 공단은 1,460명에 대한 전직신청을 실시해, 2,000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한 바 있다. 적정인력 확보는 고사하고, 신규채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단은 소위 경영합리화 방침 아래, 전국사회보험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 고용불안, 외주화, 노동자 감시통제를 전면화하면서 공단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강요하고 있다. 저들의 공격 양상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 출퇴근 전후 30분 무료봉사 △ 실적성과급 확장 △ 성과별 직급별 임금격차 증가 △ 나이와 형편에 따라 생존임금을 보장하던 연공급 파괴 △ 연봉제를 향한 사전 임금체계 단순화 작업 △ 승진 시 면접 확대로 승진의 객관성 말살 △ 단체협약을 통한 전임자, 노조활동시간 축소.

'노무관리 집행부'를 넘어서야 한다

지난해 11월 어용 집행부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노동통제 개악안을 '특근제 개선안'으로 명칭을 바꿔 총회에 부쳤다. '특근제 개선안'은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어용 집행부는 총회결과를 전면 부정하면서 "사측의 지시대로 따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공단 노무관리팀은 노조 내 각종 정보와 상황, 인맥구조를 꿰뚫고 각 지사, 간부를 전담 교육시켜 노사협조 집행부의 힘을 키우고 있다. 반면 노사협조에 반대하는 전투적인 조합원들을 해고나 징계, 전보로 위협하고 있다.

저들의 공격이 전방위적인 만큼 우리의 반격도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투쟁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공단과 어용 집행부에 맞서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 감시통제장치(ERP) 도입 저지 실적제 철폐 인력충원 의료보험 사유화 반대 등의 과제를 내걸고 아래로부터 현장투쟁 강화에 나서고자 한다.

| 발전 |

강력한 파업의 힘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작년 말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발전회사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느 발전회사가 먼저 민영화될지, 만약 민영화된다면 얼마나 해고될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자본과 정권에 맞선 두 번의 파업투쟁(2002년과 2006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2년 파업 당시, 발전노동자들은 정말 영웅적으로 싸웠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공기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38일간의 장기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결과는 대량징계와 합의서 한 장 없는 현장복귀였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패배했다는 생각이 발전노동자들을 휘감고 있다.

게다가 새롭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발전노동자를 더욱 위축시킨다. 이것은 직권중재보다 더욱 개악된 것은 물론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발전노동자 개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쟁의 저력은 살아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있었던 4대 집행부 선거에서 발전노동자들은 민주파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발전소 민영화가 코앞에 닥친 상황, 민영화 투쟁의 선봉장을 뽑는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발전노동자들은 '발전소 민영화를 투쟁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힌 민주파를 선택했다. 이것은 발전노동자의 투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집행부와 현장의 활동가들이 열심히 현장노동자들을 조직한다면 힘있는 투쟁을 만들어내고 발전소 민영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2002년의 파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를. 2002년의 파업이 없었다면 발전소는 일찌감치 민영화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발전노동자가 해고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건재하다. 파업 당시 해고된 동지들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복직했다. 최선을 다했던 지난 파업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라는 또 다른 난관 앞에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발전노동자의 저력은 살아있다!

| 서울지하철 |

다른 길이 없다 – 노동자가 죽느냐, 열차가 정지하느냐!

4월 25일 구조조정분쇄투쟁을 결의하는 서울지하철노동자들의 2차총회 – 김상돈 사장 불신임안을 투표자 대비 96.8%로 통과시켰다.

4월 14일 언론보도대로 도시철도공사는 구조조정으로 840명을 퇴출하기 위해 예비부서로 발령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12%의 인원이 "너 나가"란 말을 들은 것이다. 대규모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업무공백은 근무형태 변경(비숙박 13시~22시 근무), 검사주기 조정, 무인매표 등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메꿔졌다. 음성직 사장은 4월 23일부터 현장을 노조 위원장과 함께 순회하면서 "모두 다 직원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떠들고 있다. 그리고 곧 도시철도공사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강제퇴직을 실시할 것이다.

음성직 사장은 지난 2년간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묵인과 방조, 심지어는 적극적인 홍보였다.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투쟁은 모두 '과격한 분자들의 철모르는 소리'로 치부하거나 '직능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철저하게 외면했다. 투쟁 경험도 없고 '조합일은 조합간부가 하는 것'으로, 집회·총회에 '동원'되어 길들여져 왔던 조합원들은 현실의 고통에 대한 대안으로 잘 싸울 것 같은 간부를 선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은 작년 7월 노동조합 선거에서 투표로만 지난 집행부를 심판했고,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8월 현재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시작하자, 조합원들은 열심히 '동원'된 집회·총회에 참석했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투쟁을 아주 늘어뜨리고, 조합원 총회에 각종 국회의원을 '영접'하면서 살아있는 투쟁이 아닌, 일정표의 투쟁을 진행했다.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투쟁을 끌어낼 생각이 전혀 없던 집행부, 투쟁을 시켜 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3명의 정규직을 1명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산서를 든 저들의 공격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착같을지 예상되지 않는가?

자본은 87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해서 지하철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제도가 존재하는 한 당면한 감원, 외주, 분사라는 공격을 지연시킬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길만이 있다. 지하철 노동자를 휘감고 있는 긴박한 고용과 생존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근본 대안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비정규직제도의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 – 거점파업에서 점거파업으로

직권중재든 필수유지업무제도든 그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지하철노동자들은 직권중재에 결코 굴종하지 않았다. 89년 3·16파업, 94년 6·24파업, 99년 4·19파업, 04년 7·21파업! 불법의 족쇄를 과감하게 깨고 나갔다. 가장 단순한 진리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필수근무자와 비필수근무자의 분할만 폐지하면 된다. 즉 모두가 불법파업의 주체가 된다면 분열의 요소는 사라진다. 파업권의 완전한 쟁취는 파업 그 자체다. 직권중재제도는 '한 날 한 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무력화됐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킨 직접적 점거파업,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키는 파업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최후의 결전은 노동자가 죽느냐, 열차가 정지하느냐 둘 중 하나뿐이다.

현장투쟁에서 전국적·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지하철노동자들에게 "6~7월 투쟁으로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체 공공부문,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기집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선도'하는 투쟁부대가 있어야 한다. 관건은 그것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무장하는 것이다. 지하철노동자들이 퇴출명단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가만히 1개월을 버틸 순 없다. 당면한 공격에 맞서 비정규직 철폐, 자본가들을 위한 사유화 저지, 악법철폐, 파업권 쟁취를 전면에 건 현장투쟁의 경로를 통해 전체 노동자투쟁에 결합해야 한다.

| 도시철도 |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실동기관사	운용기관사 (관리자)	종합관제 (비조합원)	운영관제 (비조합원)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보선
평일 : 79.8 휴일 : 50	100	100	74	55	53	53.3	55	38.7

〈2월 1일 파업 시 도시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2010년까지 2,088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이 선언된 지 3개월 만에 퇴출명단이 작성되고, 조직개편과 분사계획이 완료됐다. 명단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투쟁은 불가피해졌다. 현장의 분노와 저항으로 공세는 주춤거린다. 하지만 저들도 비켜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조직개편과 감원, 외주화, 분사는 서울시 전체 사안으로 확대되었고 중앙정부의 사유화계획과 통합됐다. 정부와 자본은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빵부스러기조차 노동자들에게 던져줄 마음이 없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정치적 계급투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내고 있다. 노동자들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투쟁요구로 도약해야 한다. 고용위기에 처한 지하철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급의 사안을 자신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긴박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돌파하자!

창의혁신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감원(정년퇴직, 희망퇴직)', '외주·하청', '분사', '모든 형태의 전환배치'는 월3~400만원의 정규직 노동자를 월100만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1명의 정규직을 퇴출

두려워하는 조합원은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필수유지업무 –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도시철도공사는 첫 필수유지인원 적용사업장이었지만, 필수유지업무를 극복하려는 시도보다는 '합법파업' 등으로 우회하고 회피할 생각만 했다. '필수유지업무 피해자 공동보상'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가 없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필수유지업무가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이 '일정표를 잘 세우는 것', '조합원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총파업이 성사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필수유지업무는 분명한 악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정표만의 투쟁, 투쟁에 대한 두려움, 조합원의 자유롭고

자본가정부는 언제나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투쟁으로는 결코 이 악법을 넘어설 수 없다.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라는 결의와 실천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적인 확대 재편! 그것으로부터 우리 투쟁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 공무원 |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공세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까지 노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 CEO'를 자임하는 이명박은 모든 사장들이 그렇듯이 실용과 효율성, 비용절감을 외치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나서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따르면,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 월액의 76% 수준인 연금을 50%로 줄일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취업사기

"임용 때는 낮은 임금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제한을 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것은 '취업사기'와 다를 것 없다." 4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렇게 분노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공무원연금은 사실 임금의 일부다. 그나마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저임금과 기본권 제한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마지막 기대감마저 산산 조각내면서 공무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과 일체의 대화를 배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중 집회가 속속 전개되고 있다. 철도, 지하철, 발전 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모든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투쟁 주먹을 뭉쳐야 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공격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공동투쟁을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공동의 투쟁 깃발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깃발이란 곧 강령이다. 여기에는 단지 즉각적인 부분적 요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으로 뻗어나가야만 한다. 부분적 요구로부터 출발해 자본가정부를 제압하는 투쟁으로까지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을 제시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미 〈대중행동강령〉을 통해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강령〉은 〈대중행동강령〉의 정신과 원칙을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여기에는 원문을 축약해서 싣는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거대한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에 패배를 안겨주자!

1. 공기업 사유화 반대!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우리가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은 간단하다. 정부가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구조조정 즉 인원감축,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생존권 유린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은 곧 노동자 착취강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또한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재의 가격을 제멋대로 올려놓는다. 작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밖에서 노동대중의 주머니를 털어 자본가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G파워로 분리 매각된 후 LG파워에서는 무려 60%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다. 철도에서도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천 명의 인원을 감축해왔다. 인원감축은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이에 맞서 우리는 노동자통제 하의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를 주장한다. 국유화 조치 자체가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국유화 요구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국유화 조치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노동강도 강화, 인원감축, 비정규직화 등) 시도를 격퇴하는 관제고지를 장악할 수 있다. 둘째, 사유화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공공재 물가폭등을 제압할 수 있는 관제고지를 장악할 수 있다. 우리는 공기업들이 자본가의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화된 공기업들의 운영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자!

공공부문 사유화 공격의 본질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화란 이미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철도에서는 상하분리에 따른 유지보수 분야 외주화로 수천 명이 고용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에서는 2010년까지 인원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도시철도에서는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전환배치 통보를 받고 절망에 휩싸였다. 발전소 매각, 상수도 민간위탁, 공무원 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뒤흔드는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코앞에 닥쳐 있다.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장치다. 이것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악하는 것은 곧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의료서비스를 완전히 상품화함으로써 부자들과 가난한 노동자들 사이에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투쟁요구가 제기된다.

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

② 외주화, 분사화,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를 분쇄하자!

③ 공무원연금 개악을 비롯한 실질임금 삭감 시도를 분쇄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④ 의료보험 민영화를 저지하고, 무상의료 쟁취하자!

3.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이윤 논리가 강화될수록, 현장노동자의 안전은 방치되고 노동대중의 생명과 편의는 파괴된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및 선로작업 중이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7인의 사망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2006년 보령화력에서는 수소가스 폭발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불과 몇 개월 후 같은 곳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을 저들에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작업중지권—현장통제권 역시 필수적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현장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중지권—현장통제권을 쟁취하자!

그리고 이 조치는 작업장을 넘어, 노동자 산업통제권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돈벌이를 위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이용료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후릴 필요가 없는 노동자계급이 산업통제권을 움켜쥐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가체제가 초래하는 모든 해악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4.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완전한 파업권 쟁취!

전면적인 사유화 공격이 개시되면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의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자본가정부는 이러한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앞세우고 있다. 올해 도시철도 파업이 무기력하게 꺾이는 상황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파괴력을 체험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도록 방치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이 사실상 마비되어버릴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 분쇄' 요구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자본가정부의 사유화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저해하는 모든 노동악법을 분쇄하자!

5.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확대 재편하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노동자에게 전혀 양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이른바 엄정한 법 집행, 시위대를 위협하는 사복체포조 가동, 검찰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때려잡는' 조치를 모든 방면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일상적인 노동조합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재조직해야 한다. 통상적인 쟁대위 구조를 넘어 파업위원회와 파업선봉대(사수대)를 건설하자!

파업위원회는 '일상 시기에 선출된 대표들'의 회의기구를 넘어선다. 파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하려면, 기존의 노조 직책과 무관하게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기층 현장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파업위원회는 그것을 위한 유용한 장치다. 파업위원회 건설은 기존의 직책,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 조합원·비조합원의 차이를 넘어 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고 대표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처럼 현장 전체를 대표하고 단결시키기 위한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때에만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파업선봉대(사수대) 역시 필수적이다. 파업선봉대는 교섭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투쟁력을 강화하는 데 복무하는 조직이다. 자본가들이 전혀 우리에게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핵심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교섭기구가 아니라 투쟁기구임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6.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이명박 정권에 패배를 안겨주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는 자본가정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투쟁이 정부와의 대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계급적 단결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담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존권을 헌납하고 저들의 공격에 각개격파당할 것인가?"

자본가정부를 내버려둔 채 노동자의 권리를 단 하나라도 제대로 쟁취할 수 있겠는가? 그런 환상은 절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오직 그것만이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부다.

이러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힘을 강화해야 한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진보정치인'이 노동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없다.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자본가들의 착취 열망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투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력을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